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16일 (토)
제 267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현대판 골품제'의 반 쪽짜리 진실
2. '국보법을 살릴 수는 없다'
3. 100만 원촌의 통곡, 이제는 멈추게 해야
4. '영화'가 국보법을 떠나보내는 장송곡이 되었으면
5. <알림> 이라크 정령 반대 10.17 국제반전공동행동

<논평> '현대판 골품제'의 반 쪽짜리 진실

'고교등급제'라는 '유령'이 대학을 배회하고 있다.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한 대학의 경우, 강남권 학생은 지원자 87명 중 28명이 합격했지만 비강남권 학생은 53명의 지원자 중 한 명도 합격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사회가 비강남권 학생들에게 선사한 '절망'이라는 높은 벽이었고, 학생들은 '출신성분'을 원망하며 분노를 삼킬 수밖에 없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대변하듯, 소위 '명문대학' 진학을 통한 계층 상승은 모든 가난한 이들의 '꿈'이었다. 하기에 '논 팔고 소 팔아서 공부시킨다'는 말이 빈말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교등급제라는 '현대판 골품제'는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꿈'을 박탈하고 부의 가치만이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보장해준다는 천박한 가치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 교육관련 사회단체가 "고교등급제는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서울 강남이 아니면 '명문대학'에 원서조차 쓸 수 없도록 하는 반인권의 극치"라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고교등급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회단체의 그러한 주장은 반 쪽짜리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 고교등급제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그나마 '명문대학'에 원서라도 쓸 수 있는 '우등생'이며, 우등생과 열등생 역시 부모가 가진 경제·문화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공교육이 '포기한' 학생,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등록금 문제로 대학의 꿈을 접어야 하는 학생 등 많은 학생들은 여전히 고교등급제 논쟁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그들에게 교육은 빈곤을 재생산하는 처참한 현실을 확인하는 '절망의 벽'일 뿐이다.

다시, 문제는 '교육의 공공성'이다.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인류가 개척한 진리의 지평을 확대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 이는 '학교' 현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진다. '어린이 공화국 뽀포스타'는 우리에게 소중한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역사다. 뽀포스타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 공부를 하는 대가로 오히려 돈을 받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학교 밖에서 '삶을 배운다'.

세계인권선언 역시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함을 인권의 원칙으로 밝히고 각국 정부가 세부실천계획을 실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민이 결심하는 일만 남았다.

<기사 처음으로>

"국보법을 살릴 수는 없다"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결정 역사에 남을 것

17일 열리는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 인권·사회들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에 대한 보완입법안이 이날 확정되기 때문이다.

전국 305개 인권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5

일 "역사는 10월 17일의 정책의총을 기억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국보법 폐지'라는 역사적 임무를 열린우리당에 엄중히 각인시켰다.

국민연대는 "56년 내전과 분단, 독재와 억압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민주와 인권, 통일 을 이루기 위한 큰 걸음은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하 며, 의원 모두가 '완전한 폐지'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한 것이 다. 이날 성명은 만약 당론이 명백한 폐지 입장에서 벗어난다면 "전국의 시민사회가 열린우리당의 반역사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보연대는 4개의 대안이 "무리하게 형법에 국보법 조항들을 옮기거나 대체입법 을 만들어 문제점을 존속시킨다"며 '잘못 제출된 문제지'라고 일축했다.

대안 중 대체입법안은 △국보법의 1조에서 5조를 일부 자구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 형법 보완 대안들 역시 '내란목적단체'에 대한 규정 등 복한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국보 법의 폐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폭동' 행위 없이 내란 목적단체 구성만으로 처 벌되게 되어 있어 다른 형법 조항들과 모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5일 '열린우리당 보완입법 '제2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했다. 민변은 제2안의 제102조는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를 '적국 또는 외국'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 적, "102조에 준적국 규정을 추가하지 말고, 제93조에서 제99조까지 규정된 '적국'이 란 표현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단체'로, 그 중 간첩죄에 있어서는 '외국 또 는 외국인의 단체'로 수정하라"고 제안했다.

한편 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김동원 목사를 비롯 개신교 목사들로 구성된 '민족의 화해 와 국보법 폐지 기독교운동본부'는 15일 출범기도회를 갖고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으 며, 광주 전남 지역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3천여 명과 성공회대 교수회도 폐지 선언 에 합류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10개 여성단체는 13일 '국보법폐지여성실천단'을 만들어 "국보법 완전폐지"를 주장했으며, 제주도 내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국보법폐지제 주연대'를 결성하는 등 전국 각 사회 영역에서 국보법 폐지 운동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 다.

<기사 처음으로>

100만 원혼의 통곡, 이제는 멈추게 해야

민간인학살 피해유족들, "한나라당은 과거청산에 적극 나서라"

15일 오후 2시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는 삼베로 만든 두건을 쓴 100여명의 상 주들이 모였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던 사람들이 뭐를 잘못했다고..." 한국전쟁전후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공권력에 의해 비명에 간 사람들의 유족들은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제사 한번 제대로 지내지 못했다. 그렇게 한을 가슴에 새기며 반세기를 지냈 다. 이들이 한나라당사 앞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준)와 열린우리당이 각각 민간인학살 진상 규명을 포함한 포괄적 과거청산관련 법안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은폐·조작되어온 국 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과거청산에 대해 친북좌익 활동 조사 등을 거론하며 색깔논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원회)는 전국유 족대회를 열고 "과거청산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국본분열 운운하 며 진상규명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도 과거청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 다.

이어 한나라당의 역사연구에 맡기자는 '학술적 과거청산' 주장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 야할 국가의 의무를 민간에 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과거사 은폐 시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특별법쟁취위원장은 "과 거청산은 좌·우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인권 유린한 것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강 조했다.

한나라당에 대한 성토는 16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은 "민간인학살에 대한 특별법이 16대 국회의 본회의까지 상정됐지만 한나라당 의 반대로 부결되었다"며 한나라당은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청산에 동참하라고 목소리 를 높였다.

산청유족회 정명근 회장도 "한나라당은 과거사에 죄를 짓고 있는 당"이라며 "과거청산 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강력한 진상규명 기구 설립에 앞장서라"고 꾸짖었다.

이날 전국유족대회는 '민간인학살과 과거청산 완전 해결하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비행기로 접어 한나라당사 안쪽으로 날리면서 마무리가 됐다. 규가족들은 오는 11월 5일 여의도에서 합동위령제를 열고, 권한 있는 과거청산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영화'가 국보법을 떠나보내는 장송곡이 되었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영화적 상상력과 리얼리티를 제약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독립영화인들의 카메라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문화주간(10월 15일~23일)에 발맞추어 기획되고 한국독립영화협회(아래 한독협)의 주관으로 추진되는 '국가보안법철폐 프로젝트'(아래 프로젝트)가 그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이 프로젝트의 프로듀서를 맡은 인디다큐페스티벌의 홍수영 사무국장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작업을 하는 독립영화인들이 영화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현재 운동진영의 화두인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에 동참한 것"이라며 프로젝트의 의의를 설명했다. 프로젝트는 국가보안법이 끼친 사회적 악영향이 넓고 깊은 만큼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을 다채롭게 논하는 6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김정만 감독은 <학습된 두려움과 과대망상>에서 국가보안법을 맹신하는 자들과의 인터뷰와 한국 현대사를 기록한 필름을 포개어 놓으며 '반공이라는 오래된 망상 속에 존재하는 적에 대한 맹목적인 두려움'의 실체가 왜곡된 한국 현대사에서 기인함을 드러낸다.

최진성 감독의 은 국가보안법을 한번 고의적으로 어겨보겠다는 '도발'에서 시작한다. 감독은 애초 국가보안법 사수 집회에서 빨간 옷을 입은 '텔레토비 뽀'와 함께 인공기를 흔들고 적기가를 부르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여 카메라에 담으려 했다. 결국 뜻한바 그대로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작품은 국가보안법을 회화화하여 그 실효성을 되문개 만 들도록 제작되었다.

그동안 반세계화 투쟁 영상물들을 선보여 왔던 '스튜디오 아이스크림'도 이번 작업에 동참했다. 이훈규 감독은 극영화 <나쁜 피>에서 국가보안법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혈액을 유포하려는 시도와 이를 막으려는 자들의 노력을 그리면서, 국가가 민중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로 국가주의와 국가보안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발한다.

미디어 참세상 영상팀은 <저공, 원숭이 그리고 상수리열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상기시키면서, 개악된 집시법과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움직임이 국가보안법이 품고 있는 악영향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우의 청년 윤성호>와 <남매와 진달래>등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프로젝트는 17일에 열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영상제와 23일에 있을 국민문화제에 상영될 예정이며, 이후 DVD 등으로 배급될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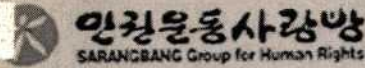
<알림> 이라크 점령 **반대** 10.17 국제반전공동

일시 : 2004년 10월 17일(일) 오후 3시
장소 : 대학로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19일 (화)

제 267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3.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한다
4.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열린우리당이 1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결정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 보완입법 안에 각계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원안이었던 형법 87조 2항에 '내란목적단체조직' 규정을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에서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로 수정했다. 이외에 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조항이나 98조 '간첩' 조항은 전과 동일하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대안 없이 현행 형법만으로 충분하다는 형법학자 등 법률가들의 충고와 인권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형법에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보완안을 비판했다. 다만 당초 안에서 논란이 됐던 내란목적단체 규정에 대해서는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전제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은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역시 18일 논평을 내 단순히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내란목적단체에 관한 조항이 자칫 '형법으로 이전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법 적용의 모호함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공안기관과 법원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규정 등을 냉전적 관점에 입각, 확장해서 해석 적용해왔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역시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반인권적으로 처벌해왔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열린우리당의 형법보완안은 국가보안법이 빚어온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확정안은 무늬만 폐지일 뿐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내용을 그대로 형법으로 옮기며 그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내란목적단체'를 조직, 가입은 물론 예비음모 또는 선전선동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서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죄 조항 삭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도 이는 "국가보안법의 또다른 변종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개혁 공조는 실종됐다"고 개탄했다.

<기사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유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이석태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개인청원 제출로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양심에

다른 병역거부 인정' 권고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최명진 씨, 윤여범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각각 2004년 7월 15일, 22일 대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현재 성동구 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들은 국내 사법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구제되지 못하고 결국 유엔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89년 제 59호 결의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고 결정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도 1993년에 채택한 일반논평을 통해 '병역거부권'의 법적 기초를 확정했다.

개인청원 제도는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이행 감시기구인 자유권위원회에 직접 통보해 권리 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에 책임을 묻는 제도다. 개인청원이 접수되면 자유권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 서면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유권위원회는 권리 침해 여부와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들을 결정하여 당사국에 통지하고, 경우에 따라 관련 당사국에 처벌을 유예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자유권위원회가 '규약 위반'으로 결정, 조치를 통보한 경우는 김근태 씨, 강용주 씨, 신학철 씨를 포함해 2004년 8월까지 모두 5건이 있다.

헌법은 정부가 가입 및 공포한 국제인권규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엔인권위에서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왔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무시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2월 개인청원 제도의 결정을 이행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도록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9월 22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한다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한다. 18일자 한겨레를 보니 국방부에서 이라크 파병을 1년 연장할 것을 확정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국방부의 생각대로 파병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3600여 명의 한반도 남녘의 군인들은 1년 더 이라크에 남아 미국의 침략 정책을 도울 것이다.

우리 나라 국군 통수권자인 노무현은 전쟁 범죄자다. 국내법, 국제법 어느 것으로 봐도 침략 전쟁터에 한반도 남녘의 군대를 보낸 전쟁 범죄자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내가 뽑은 이 나라의 큰 일꾼을 이제 내 손으로 전쟁 범죄자로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오니. 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라크에서는 침략군의 총에 가려진 이라크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다.

한반도 인민의 대다수는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전쟁 자체를 반대한다. 내가 왜 침략 전쟁터에 살인 군대를 보내는 전쟁 범죄국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 누가 해맑은 마음으로 웃으며 살아가야 할 이라크 아이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더 이상 자신의 잘못으로 수많은 착한 인민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를 전쟁 범죄자로 처벌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라크에 있는 모든 군대를 철군시켜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외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남을 죽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평화가 아니다. 배고프고 헐벗게 살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며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사는 그런 해방 공동체를 원한다.

나는 8살 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 아이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데 내 아이에게 돈을 벌기 위해 남의 목숨을 죽이는 일에 나서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 내 아이의 목숨이 소중하다면, 이라크 아이들의 목숨도 소중하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아 있는 목숨을 함부로 죽이는 침략 전쟁을 도와주는 전쟁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생각할 수 없다. 오직 경제성장만을 외치며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을 마구 죽이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미국 패권주의자들의 발걸음에 발을 맞추지 말고 살아 있는 것을 아끼고 섬기며 배고프고 헐벗지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가슴이 아프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그것이 꿈에 부푼 이라크 아이들을 마구 죽이는 미군의 패권 정책에 빠져드는 대통령을 구하는 길이요,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는 길이다. 우리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순수의 발에 살아 있는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작은 평화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우리의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 그가 진정으로 누우쳐 살아 있는 것을 아끼고 섬기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은종복 님은 '풀무질' 서점 일꾼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1. "조건없는 국보법 폐지"로 사상·표현의 자유 쟁취!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당론으로 확정하여 4개의 보완입법안 발표/ 재일 한국민주 통일연합 고국방문단 "17대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10.12)/ 여성단체들, '국보법 폐지여성실천단' 발족/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 국보법 폐지 촉구 서한 각 당 대표에 전달(10.13)/ '민족의 화해와 국보법 폐지 기독교운동본부' 발족/ '국보법 완전 폐지' 등을 촉구하는 '아주 타당한 자유를 위한 반국가보안법 문화주간' 시작(10.15)/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에 따른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 신설한 형법보완안 확정(10.17)/ 국보법폐지를 위한 국민연대 등 인권사회단체 "열린우리당 최종안이 여전히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건없는 국보법 폐지' 주장(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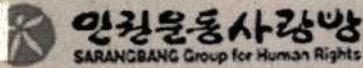
2. '과거사 청산', 역사에서 소외된 이들의 '숙제'
 군폭력근절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등 3개 군의문사 관련 단체들, 포천시 보병제6군단 앞에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입법안"에 군의문사 관련 법안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 돌입(10.14)/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진행...<조선일보>에 '유죄' 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나라당사 앞에서 전국유족대회 개최...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강력한 기구 설립 주장(10.15)/ 열린우리당,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독립운동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과거사기본법안으로 정책의총에서 최종 결정(10.17)

3. 21세기 한국, '노동자 탄압'은 여전히 20세기
 부당노동행위 진정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연행한 것으로 밝혀져(10.12)/ '엘지정유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노동자들에게 '반성 서약서'와 '경위서' 작성 강요 등 엘지정유의 '복귀 프로그램'이 노조탄압 일환임을 폭로(10.13)/ 안양시 청소대행업체의 임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노동자들을 대행업체가 한꺼번에 해고...환경미화원노동자들 △해고자 복지 △단체협약 체결 등 요구한 파업 농성에 안양시 '나몰라라' 법원, 2001년에 파업한 효성노조에 '70억 손해배상' 결정(10.14)/ 국제공공노련,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 전달(10.17)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20일 (수)
제 267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하루소식
해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장애인교육 의지 없는 교육청
2. 사라진 여고생 사진과 '주홍글씨'의 공포
3. 누구를 위하여 '생존권'을 말하는가
4. '차라리 감영인을 감옥에 가둬라'

장애인교육 의지 없는 교육청

장애인교육권연대,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성 중

"어떻게 교육청이 학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청문은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완강히 내려져 있었다. 서울시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80여 명은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 합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18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 모였다. 학부모들은 "단지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지만 교육청은 한때 음식물 반입조차 불허했다.

이 자리에서 만난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우리는 평범한 학부모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평범한 학부모들'을 농성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에게 한 달 교육비만 85만원이 든다"며 "이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했다. 비장애 아이들은 '성적 향상을 위해서' 사교육을 받지만, 장애 아이들은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다. 학교에 다니더라도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통학하는 것조차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그나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행인 속에 속한다.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홍호 씨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고향인 조치원에서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하는 거리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씨는 야학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녹록치 않다. 서울에는 100여 명의 장애인들이 6개의 장애인야학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장애인야학은 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다. 교육청이 장애인야학을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교육예산에서 특수교육예산은 2.5%에 지나지 않는다.

이날 서울시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7월 교육부와 합의한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유치부·고등부에 특수학급 우선 증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 확대·배치 등 7개 안을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보기에 교육청은 이 합의안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 한 학부모는 올 하반기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확충하긴 했지만 이는 내년도 계획을 앞당겨 시행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또 올해처럼 교육감이 바뀌면 새롭게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교육청의 관료주의도 문제다. 이에 울산에서는 5일부터 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 경남에서도 12일부터 학부모들이 삭발까지 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시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들은 '교육감 면담'을 요구했지만 결국 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 등을 만나는 데 그쳤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그 자리에서 '검토해보겠다'는 '하나마나한 말'만을 전달하는 데 그쳤을 뿐이고, 농성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기사 처음으로>

사라진 여고생 사진과 '주홍글씨'의 공포

▷ 즐거운 물구나무 ◀

"귀갓길 여고생 실종 5일째"

야무지게 다문 입술, 앓던 얼굴의 한 여고생 사진 아래 안타까운 제목이 달려있다. 며

질 제 증적을 알 수 없으니 찾는 이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무슨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스레 기사를 읽어 내려간다. '속옷도 버려져 납치된 듯' 선정적인 부제목이 눈길을 확 잡아끈다. 속옷까지 버려졌다고? 자연스레 끔찍한 성범죄 장면이 뇌리를 스친다. 오작 소름이 끼쳐 눈을 감는다.

며칠 전 연합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들은 천안에서 실종된 여고생 사건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보도했다. 버려진 채 발견된 물품 가운데 '속옷'이 있었다는 사실도 빠짐없이 실렸다. 하루 방문자만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미디어다음은 그녀의 사진과 기사를 초기화면 탑 기사로 올렸고, 네이버에도 같은 사진과 기사가 실렸다. 천안 경찰은 현재 사진이 실린 전단지들 곳곳에 배포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고생의 사진을 본 걸까? 그녀가 살아있을까 하는 걱정보다 설령 살아있다 해도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그녀가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안 봐도 비디오!'라는 식의 의혹에 찬 시선들이 그녀를 따라붙을 테니 말이다.

성범죄의 피해자를 '폭력의 희생자'라기보다는 '불결'이나 '타락'과 연결시키는 이 사회에서 그녀는 과연 버려질 수 있을까? 그렇게 평생 그녀의 삶에 주홍글씨처럼 새겨질 낙인의 공포를 생각하면 숨이 턱 막혀 온다. 그녀가 결국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녀는 과연 자신의 사진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을 원했을까?

물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성범죄의 가해자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하지만 성범죄 혹은 성범죄 사건일지 모르는 여성의 실종 사건을 다루는 언론과 법집행당국에는 피해자가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속옷'이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찾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다만 사건을 접하는 이들의 호기심과 그녀에 대한 낙인 효과만 배가시킬 뿐. 다중이 접근하는 언론은 실종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10대 여성의 얼굴을 팔아 독자의 눈길을 끌고자 하는 것인지 자신에게 되물어 보아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누구를 위하여 '생존권'을 말하는가

왜곡된 성의식으로 여론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

지난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의 잔혹한 본질을 은폐시키려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성매매특별법 은행도 유탄?", "기생관광 침체우려" 등 언론의 보도는 수십 조에 달하는 거대한 '성산업'과 상부상조해온 산업계가 된서리를 맞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투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는 이러한 언론들의 시각이 "성매매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돈의 먹이 사슬이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만큼 다양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지적한다.

성매매를 산업적·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관점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착취, 감금하는데 앞장서 온 '포주'들에 대한 비호로 이어진다. '성매매 없는 세상, 이룸'의 선재 활동가는 "포주들이 버젓이 국회의원 방을 다니면서 스스로의 생존권을 호소하는 장면을 목격한 지인이 있다"면서 범죄자인 포주들이 국회를 활보할 수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남성의 성욕을 풀 배설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근거해 성매매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망언도 여전하다. 한나라당 김종환 의원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성인 남성들이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는 뼈뺀 성문화로 인한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성구매 남성들과 포주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언론 역시 이같은 '성매매 옹호론'을 유포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이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를 근절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선재 활동가는 "강도, 살인 등의 행위를 처벌해도 범죄 자체가 근절되는 건 아니"라며 "왜 유독 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만 해당 범죄의 근절 여부를 강조하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상당수의 언론들은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일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오히려 이 법이 피해 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포주들의 모임인 '한터'가 시위를 제안한 것이고, 포주들이 시위 현장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가했다는 등의 '신빙성 있는' 소문들에는 잠잠할 뿐이다.

여성단체들은 피해 여성들의 '자발적' 시위 참여가 맥락을 통해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선불금' 등을 통해서 일을 할수록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개미지옥'의 구조에 빠져있다. 게다가 '자활 대책에 대한 정보'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멀기만 하다. 탈성매매의 가능성을 입증하며 씩터나 자활센터에 물적·인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현실의 과제는 외면한 채, 왜곡된 성문화와 경제 논리를 등에 업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들의 행태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기사 처음으로>

"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에이즈 감염인 인권 토론회..."에이즈정책, 인권 침해적이고 실효성 없어"

19일 'HIV/AIDS(아래 에이즈) 정부관리정책과 감염인의 인권'에 관한 토론회가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자의적 해고, 진료거부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표되어,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감염인의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았다.

나누리+ 윤호제 대표는 "에이즈 환자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혹은 '위험한 사람'과 같은 이미지가 씌워지는데, 이런 편견이 사생활 침해나 취업 제한 등 각종 차별로 이어진다"며 "에이즈 감염인을 '에비 범죄자'나 '걸어다니는 폭발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에이즈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의 '에이즈예방법'은 실효성 없이 감염인의 인권침해만 낳고 있다는 것. 정부는 '감염될 만한' 사람들을 검사를 매개로 감시를 실시하고, 이에 응할 때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누리+ 미류 활동가는 "에이즈 관리정책은 감염인들에 대한 통제를 위주로 하고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며 "자신도 모르게 에이즈 검사가 이루어지고, 익명으로 검사를 해도 양성 판정이 나면 실명으로 국가기관에 등록될 뿐만 아니라 평생 정부에 생활이 노출되고 주변 사람에게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류 활동가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다른 모든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사 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익명' 제도가 되도록 개선돼야 하고, 에이즈예방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검사나 취업제한, 전파매개행위 금지 의무 등의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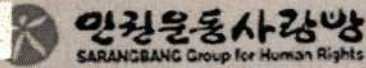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편견은 의료인조차 예외가 아니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성환 내과전문의는 "의사들은 물론 병원 전체가 감염인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며 "HIV 감염 증세가 만성 질환화함에 따라 대학병원 등과 같은 3차 의료뿐만 아니라 지역의 1차 의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정부가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21일 (목)
제 267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2.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3. 사립학교가 사유재산인가?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고 인권회복을 위해 정부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먼 얘기다" 아침 8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는 목발을 짚은 초로의 남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간첩으로 조작되어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10년 동안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으려했던 신귀영 씨. 지난 6월 10일 대법원이 '신 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에 대해 재항고 기각결정을 내리자, 신 씨 가족은 다시금 낙담으로 추락하는 심경을 맛보아야 했다.

'조작간첩'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사례다. 조작된 간첩이 필요로 했던 시대, '간첩'사건 그 자체는 공포정치를 통해 부도덕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서울 퍼런 1980년대 전두환 전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조작간첩' 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은 공안기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 돼 40일에서 70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을 통해 간첩으로 '만들어진다'. 또 법원은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이들을 '간첩'으로 판결내렸다.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간첩'이라는 멍에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진실을 밝히려하며 시작한 신 씨 가족의 긴 여정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 씨 가족은 변호인과 함께 '재심'을 통해 잘못된 법원의 판결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새로운 증거수집과 증인 확보에 나섰다. 재심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사유로 원 판결의 증거물 등이 위조·조작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994년 11월 신귀영 씨는 "(신수영 씨는) 조총련 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령을 내릴만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신수영 씨(신 씨 친형, 당시 일본 거주)의 진술서를 확보해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또한 경찰의 불법감금과 고문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1995년 7월 1·2심 재판부는 재심을 받아들였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새로 제출된 신수영 씨의 진술서만으로는 무죄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신 씨 등이 주장한 관련 경찰관들의 고문, 감금행위도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 씨와 변호인은 목격자 박모 씨가 고문으로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다시금 재심을 청구했다. 2001년 8월 부산지방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재심결정을 다시 뒤집었다. 부산고등법원은 2002년 7월 "증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로 증명된 것이 아니고, 고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신귀영 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지난 6월 대법원은 또다시 기각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정재승 변호사는 "대법원이 너무 재심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원 재판 자체가 잘못된 것이 눈에 보임에도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씨 역시 "위중한 사람을 법정에서 세워 진실을 고백했음에도 또다시 기각시키는 것은 권력의 횡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1인 시위는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항의이며 사법정의를 세우고자 하

는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다. 21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 '신씨일가 조작간첩 사건'의 가족은 대법원 앞에서 조작간첩의 피해사례를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편집자주 : 지난 13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국감에서 "국가정보원이 4월, 반한 이슬람 단체 '다와물 이슬람 코리아'를 적발하고 방글라데시 조직원 3명을 강제추방했다"며 이주노동자들의 '테러지원' 가능성을 지적했다. 언론도 이들이 아직 '일망타진'되지 않았다고 '테러위협'을 보도한 바 있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마숨 씨가 '테러리스트'로 모략당하는 억울한 사연을 본지에 보내왔다.

최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은 극에 달하고 있다. 라마단 기간인데도 기도하러 사원에 가는 것조차 두렵다. "1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바로 와서 잡아 간다"는 소문에 다들 홀로 기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택시 기사에게 '방글라데시인'이라고 했더니 "방글라데시인은 모두 테러리스트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다.

'다와물 이슬람 코리아'는 종교 단체일 뿐이다. 이슬람을 알리고 사원을 관리하는 일이 주된 활동이다. 그들은 국정원과 김재경 의원이 발표한 '반한활동'을 한 적이 없다. 국정원은 '외교적 문제'때문에 구체적 '반한활동'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대사관은 15일 "한국정부로부터 '방글라데시인이 반한단체와 연관되어 추방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조차 "불법체류자로 추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인들이 추방당했던 당시에도 '반한활동'이나 '테러리스트'라는 말은 없었다.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몰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비두와 자말 동지가 체포되어 강제추방되었을 때도 한국 정부는 '테러리스트'라는 '딱지'를 붙였다. 명동성당농성투쟁단 대표 샤말 타파 역시 '반전집회'와 '비정규노동자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추방당했다.

나는 96년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8년째 노동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인이다. IMF 때는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했고 사장들에게 사기를 당한 적도 여러 번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를 '싸게 부려먹고서' 이제는 쫓아내고 있다. 그것도 '테러리스트'라는 '딱지'까지 붙여서 말이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테러리스트'로 몰려야 하는가?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했기 때문에? WTO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테러'라면, 나와 함께 싸웠던 수많은 한국 사람들도 모두 테러리스트란 말인가? 내가 노동조합운동, 반전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 나라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다.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용허가제', '강제추방'이라는 부당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이 '반한활동'으로 추방되어야 하는 이유인가?

나는 또한 평화를 바라는 한 인간으로서 반전운동에 참여한다. 이라크 아이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김선일 씨가 죽임을 당하고, 한국이 테러위협에 시달리는 것은 한국정부가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잘못된 파병 결정이 '한국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런 부당하고 위험한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당해야 하는 일인가?

나는 이 땅의 노동자로서, '강제추방'이 사라지고 '노동허가제'가 시행될 때까지, 또 '이라크 파병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글라데시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마숨 씨는 평등노조 이주지부 노동자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사립학교가 사유재산인가?

사학단체들, 학교폐쇄 불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사학재단의 비리를 양성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을 앞두고 사학단체들이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단체 대표들은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배상을 국가에 요구하고 학교를 가진 폐쇄하겠다"며 공격 교육 공간인 학교의 존폐를 불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를 드러냈다.

이에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아래 국민운동

본부)는 "작은 기득권마저 포기할 수 없다는 사학 재단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운동본부 유재수 사무국장은 "학교가 이사장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라는 발상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국가가 학교 재정의 90%를 지원하고 재단은 고작 10%의 출연재산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소유권'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들의 행태에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 운영위의 심의기구화 등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포함한 법안일 뿐인데도, 사학단체들은 이마저도 '결사항전'의 자세로 법안 통과를 막으려 하고 있다. 반면 국민운동본부는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이미 충분히 사학재단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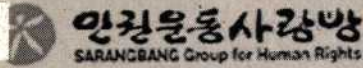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이사 추천 시 법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고, 기부금 채용 등 솔한 사학비리를 키워온 교원임면권을 여전히 재단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20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여 사립학교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법안 통과를 촉구할 방침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22일 (금)
제 268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2. 몽치면 잡아가는 '공무원노조특별법'
3.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4. 국가보안법 폐지 대동 한마당 열린다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2기 상임위원 인선이 임박함에 따라, 전국 33개 인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인선 기준'을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1기 위원 인선 과정이 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를 21일 인권위를 비롯해 청와대, 국회, 대법원으로 보냈다.

연석회의는 △공개적인 검증절차 없는 비공개 △'정치적 인사' 또는 '비리전력자' 등 부적절한 인물 △법조인 편중 등을 1기 인선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 차질 △소수 상임위원 중심의 편향적 운영 △신속한 인권피해 구제 불가 △법 해석에만 의지해 소수자 등 다양한 인권 문제 도의시 등의 폐단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원의 자질을 명시하고 있다. 총11명의 상임위원 중 3년 임기를 마친 8명을 올해 안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먼저 가장 중요한 자질로 '인권의 감수성'을 꼽았다. 이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평가'에 그치는 않고 '개선'에 대한 의지로 이어지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강조했다. '내심'보다는 '구체적인 공익활동 경력' 등을 참고해서 '인권의 감수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감별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대해 연석회의는 '현장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법' 해석에만 몰두하는 '법률가나 교수' 중심의 구성은 오히려 인권위의 사회적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분야의 전문성이란 '학문적 지식을 넘어 인권분야의 장기적인 활동 경력'으로 가능해야 한다고 연석회의는 말한다.

이 외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전, 현직 정당의 간부나 당직자'뿐 아니라 '고위공무원'도 배제되어야 하며, 타기관보다 '고도의 청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위/비리전력자의 제외'는 물론 인권에 대한 발언이나 발표 자료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 구성은 '각계각층의 다원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동·장애·종교·문화예술' 등에서 고르게 추천되어야 하며, 여성계로만 구성되었던 1/3 여성할당도 '각 분야 출신의 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전문가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의견서는 인선 절차에 대한 제안도 곁들였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잠재적인 피해자인 '국민'과 인권 향상과 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인권운동단체' 등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 추천 △후보 경력 등 자료 공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기사 처음으로>

몽치면 잡아가는 '공무원노조특별법'

공무원노조, 15일로 파업 연기...마지막으로 대화 촉구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가 정부에 '마지막'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11월 1일 예정되었던 파업을 2주 연기했다.

21일 공무원노조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투쟁 일정을 연기 및 조정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파국을 유도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이와 같은 일정조정과 대화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하여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으로 일관할 경우 양대노총 등과 함께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11월 9, 10일 이틀동안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15일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2만 명의 조합원을 해고하겠다는 등 '강경 대처'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9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노조설립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을 불허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심의·의결을 마쳐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확정,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요구,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을 비롯 민주노동당, 전교조, 민주연대, 교수노조 등 민주진영이 참가해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단체행동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법'이라고 비난, 정부에 사법처리 운운하며 협박으로 일관하지 말고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교육·보건의료·철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방·시장화 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0, 2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사회공공성강화·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가 주최한 'WTO·FTA 반대와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연대 국제심포지엄'은 인간다운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권리'임을 선언한 자리였다.

공공부문 시장화, 초국적기업과 WTO의 짜고 치는 고스톱

이번 심포지엄의 기조발제를 맡은 토니 클라크 캐나다 폴라리스 연구소장은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이 기업에 의해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 '공공서비스 시장화'의 본질은 초국적 기업의 부를 불리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클라크 소장은 "초국적 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공격은 WTO의 다양한 무역규범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WTO 하에서 확립된 무역규범들은 △서비스 협정에 포함된 영역에 대해 모든 국가가 해외기업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강제하고 △국유기업의 잉여금을 다른 공공서비스의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공서비스를 확장하는 정책으로 해외투자가 손해를 볼 경우 해당정부가 보상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촉진·정착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초국적기업의 마력으로부터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시민사회가 자국정부의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의 시장화 = 불평등의 재앙

이날 오후에는 한국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과 교육공공성 파괴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다. 천보선 전교조정책기획국장은 "한국에서 교육개방정책은 국내자본과 시장주의자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 "교육개방이 위험한 이유는 외국학교 몇 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과정을 동반한다"고 분석했다.

천 국장은 대표적인 교육 시장화 정책으로, △등록금을 포함해 국내교육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영리활동이 허용된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전면 허용 시도(제주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예고/지역특화발전특구법의 제정) △자립형사립고교 등 교육 사유화 정책 △계약직 교사 확대 등 고원유연화 정책 등을 꼽았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형 학교와 돈벌이 사학의 난립을 부르고, 교육비 상승과 학교간 격차 심화에 따른 교육불평등과 공교육의 질 하락,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천 국장의 설명이다.

또한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대표는 "명문대를 가기 위한 치열한 교육경쟁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가"라고 반문, "소모적인 교육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교육개방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답은 공교육정상화와 교육

기회확대를 포함한 교육공공성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수잔 홉 국·국제교원노조 부의장 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빈곤,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교육이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WTO 서비스 협정에 의해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제정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21일 △공공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문제와 공공성의 위기△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을 끝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특히, 21일 토론에서는 공공행정서비스와 기간산업의 시장화 정책이 공공성의 파괴뿐만 아니라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기사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대동 한마당 열린다

민주·인권·통일의 한마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문화제'가 23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열린다.

이번 문화제 기획을 담당한 민주노동당 우위영 문예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바뀌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큰 규모의 행사가 그동안 꾸려지지 못했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문화제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대중의 열망을 분출시키는 대규모 행사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문화제에는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등 각계각층에서 준비한 퍼포먼스, 율동, 공연 등이 펼쳐진다. 특히 '국가보안법 장례식'은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로, 우 문예위원장은 "민중을 탄압해왔던 악법이 무덤으로 사라지고 민중이 승리를 거머쥔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화제에는 국가보안법 56년 탄압의 역사를 상징하는 56미터의 쇠사슬을 이용한 춤 공연이 준비되고 있다. 또 강강술래와 기차놀이 등 참가자 전체가 신명나게 어우러지는 한편의 민주·인권·통일의 대동한마당이 벌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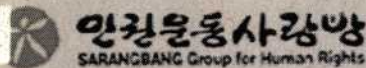
문화제에는 정태춘, 한대수 등 독재정권 아래에서 노래로 민주와 자유를 열망했던 가수들과 대강금 주제곡 '오나라'를 부른 가수 '이안', '우리나라' 등이 함께 노래한다.

이안 씨는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통일을 위한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도 모두 범법자가 되어버리므로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국가보안법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모여서 즐기고 어우러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문화제에 참가하는 소감을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23일 (토)
제 268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2. '예배선택권' 보장을 위한 힘겨운 걸음
3. '가난'은 속명어 아닌 인권 침해
4. 변방의 미디어, 독립다큐멘터리 통제 열려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16년 동안 베일 속에 숨어 국민을 감시해 온 공안문제연구소의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경찰대학 부설 기관으로 1988년 설립된 이래 연구원들뿐 아니라 연구소장의 이름조차 기밀이었던 '비밀조직'이 바로 공안문제연구소다. 이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한 짓이란 '좌익', '용공', '반체제' 등의 딱지를 붙여 기본권을 제약해 온 것이 최근 우리 사회를 분노케 하고 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불철주야 '사상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사찰한 '문건'은 매년 수천 여건으로 지금까지 무려 8만여 건에 이른다. <태백산맥>과 같이 국민들에게 널리 읽힌 베스트셀러 소설들, <자본론> 등 세계적 철학자의 이론서, 심지어 교과서에 수록된 <난장이가 쓰아 올린 작은 공>도 감정 대상이었음에 기가 찬다.

뿐만 아니라 동화나 시, 가요, 언론 기사, 노동·사회단체에서 나온 자료들 그리고 공당인 민주노동당까지 이들은 몰래 감시해 왔다. 정치적 표현뿐 아니라 예술과 학문, 언론 등 일상을 날날이 해부하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머리 속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왔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가 국민의 내심을 판단해 처벌하는 고약스런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공안문제연구소의 '단골 고객'은 국민의 머리 속까지 캐고 헤집어 '좌익', '용공'을 덧씌워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만들기에 열을 올려왔던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공안기관이다.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다는 기만적인 이유를 들며 사실상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공안기관들은 독재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상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단어 하나조차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이들의 '목적 수행'을 완성시키기 위해, '처벌할 수 없는 대상'을 '좌익·용공'으로 감정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제조해주는 '꿈의 공장'과 같다.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22일 허성혜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안문제연구소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증거물'에 대한 감정서 발급을 즉각 중단시키겠다고 미봉책을 내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동안 '공안'의 논리를 알세워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온 공안문제연구소는 마땅히 국가보안법과 함께 장사지내야 한다.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기사 처음으로>

'예배선택권' 보장을 위한 힘겨운 걸음

강의석 학생 학교에 '합의이행' 촉구하며 일주일간 재 단식

학교가 '예배선택권'에 대한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 16일 재 단식에 들어갔던 강의석 학생(대광고 3학년)이 22일 단식을 마쳤다. 강의석 학생은 '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46일간 단식하던 끝에 지난 9월 24일 학교로부터 간신히 합의를 이끌어냈었다. "학부모의 동의와 담임과 교목실 상담을 통해 '예배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합의내용이었다. 그러나 '합의이행'에 대해 학교가 보여준 태도는 강의석 학생을 다시 단식으로 몰고갔다.

강의석 학생은 합의내용을 교내방송을 통해 전교생들에게 전달하자고 요구했지만 학

교는 이를 거부하고, '합의이행'의 책임을 교목실에 일임했다. 16일 강의석 학생은 1, 2학년 학생들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개별성경공부', '청소' 또는 '체육시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예배선택의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도 덧붙여졌다.

재 단식에 들어갔지만 학교는 '합의이행'에 즉각 나서지 않았다. 18일, 학교는 강의석 학생을 지지했던 류상태 목사에게 교단의 뜻에 따르지 않으려면 학교를 떠나라는 '경고장'을 보냈고, 20일 '예배선택권 보장'을 알리는 학생들에게 학생부는 '진술서'를 받기조차 했다. 같은 날 강의석 학생은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21일 학교는 회의를 열어 '개별성경공부' 등 지금까지 나왔던 대체활동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날 교사들은 "학교가 예배 불참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합의서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강의석 학생은 "예배에 불참하면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선생님들을 찾아가 정정을 부탁드렸는데 받아들여 주셨다"고 학교의 분위기를 인터넷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 현재 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종교 수업시간 예배 불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단식으로 '예배선택권'의 실행을 한 걸음 옮겨 놓기는 했지만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부모의 동의물 얻는 과정과 함께 이후 담임과 교목실 상담을 거치면서 교사의 자세에 따라 학생의 예배선택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학내 종교활동 강제'의 빚장은 이제 겨우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15일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서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 왜 인권인가'라는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6월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이 인권위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인권선언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접수한 11건의 집단진정 중 대부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고 정책국으로 이관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정책권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동행동은 워크숍을 통해 "불안정노동과 빈곤도 인권의 문제"라며 인권위에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상임활동가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가리키는 '사회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는 인간적인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 절실한 것이지만, 궁핍한 인간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도 "빈곤으로 인해 어떠한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조차 봉쇄된 채 가까스로 목숨만 유지하는 삶은 인간적인 삶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빈곤 대책 중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급 뇌성마비장애인이었던 고 최옥란 씨는 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한 달에 26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매달 지불해야 하는 약값만 26만원이 넘었던 그녀는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수급받고도 한 달에 33만4천5백원이 부족했다. 결국 그녀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빚에 의지해야 하는 자신이 한심스럽고, 기초범이 원망스럽다"며 "더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2002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살기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해오는 글들로 가득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외면하고 있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또한 가난을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유 사무국장은 "사회적으로, 가난한 것은 개인이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이러한 믿음은 가난하면 떼쓰거나 보채지 말라는 순응의 강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국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노숙인에 대해 "왜 사회적으로 쓸모도 없는 사람을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느냐"며 사회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내팽개쳤다.

정규직노동자 5명 중 1명 꼴로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되고, 비정규직노동자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저임금 계층에 속한다. 300여 만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고작 64만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신빈곤'은 사회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과년노동자들은 정규직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50% 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며 차별 받는다.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산업재해는 해마다 9만5천여 건 이상 발생하고 3천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것이 2003년 노동부의 공식 통계다.

류 활동가는 "이런 상황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의 이름으로 국가와 기업 등에 '의무'를 요구하는 '권리'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변방의 미디어, 독립다큐멘터리 축제 열려

그늘진 현장에 대한 팽팽한 긴장감과 따스한 시선을 놓지 않으며, 주류 미디어에서 들을 수 없는 변방의 목소리를 담아온 독립 다큐멘터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릴 '인디다큐페스티벌 2004'(www.sidof.org)에서는 국내외 독립 다큐멘터리 총 32편이 선보인다. '인디다큐페스티벌'은 '실현', '진보', '대화'를 내걸고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개최되어 온 다큐멘터리 영화제이다.

국내 인권 현장 구석구석을 포착한 최근 국내 독립다큐멘터리들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신작전'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이주노동자 운동, 반전 운동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인권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이 즐비하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과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차별을 자연스럽게 묘사한 작품들도 공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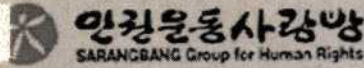
개막작 <진실의 문>은 지난 98년 발생한 김훈 씨 군의문사 사건과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의 면면을 꼼꼼히 보여주면서, '진실의 문' 열기를 거부하는 은폐조작 일색인 이 사건의 전말을 고발한다. <돌 속에 갇힌 말>은 87년 대통령 선거 때, 부정투표 혐의로 인해 농성과 무자비한 진압이 연이었던 한 선관위 사무실에 머물러 있는 감독의 기억에서 출발한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감독은 지난 10년 넘게 '물처럼 박혀 있던' 폭력의 기억을 떨치고자 시도하면서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미래를 장악한다"고 말한다. '해의신작전'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반전 평화 운동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디스코디아>, 청각 장애인들이 보고 느끼는 세계를 그린 <소리 없는 결혼> 등이 상영된다.

또한 폐막작인 <왕과 엑스트라: 팔레스타인의 이미지를 찾아서>는, 82년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침공 때 사라진 팔레스타인 미디어 본부의 필름들을 찾아나서는, 팔레스타인 출신 감독의 여정을 담았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친밀한 시선을 견지하면서 소소한 유모어를 곁들인 이 영화는, 없어진 필름 문치를 추적하는 감독의 캐를 좇으면서, 영상 이미지로 투쟁의 역사를 기록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소중한 활동을 일깨운다. 이외에도 <독립영화인 국가보안법 철폐 프로젝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이주 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 등이 특별 상영된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26일 (화)
제 268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방한보따리는 파병연장 썰기 박기'
2. 국가보안법 폐지 '골든벨' 울렸다
3. <편지>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이 국회의원들께
4.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방한보따리는 파병연장 썰기 박기"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에 반전 운동 진영 규탄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진두지휘한 전범인 콜린 파월 미 국무 장관의 방한으로 인해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다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전국 350여 개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인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파월 장관의 방한을 앞둔 25일 낮 광화문 한국통신 앞에서 '침략전쟁 주변-굴욕적 한미동맹 강요 파월 방한 반대, 파병연장 반대 결의대회'를 열어 파월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행동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수만 명의 민중들이 학살당하고 부당한 점령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군 공식 사망자도 1천명이 훨씬 넘는 등 저항이 나날이 격렬해지고 있다고 전쟁의 참상을 고발했다. 특히 전쟁 이후 "미국이 말하는 테러리즘의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세계는 훨씬 더 불안해졌다"며 '테러위협 확산'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국민행동은 파월의 방한을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썰기를 박고 용산기지협정, 북핵문제 등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여 한미동맹을 과시함으로써 수렁에 빠진 이라크 전쟁과 미 대선에 도움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아래 평통사)의 김종일 사무처장 역시 규탄 발언을 통해 "자국군을 철군하면 생기는 공백을 메워달라는 약속을 받으러 왔다"고 파월의 방한이 한국 정부에 '파병연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미정부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파월을 급파한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고, 주한미군의 성격을 동북아분쟁 대응에 활용하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월의 방한 목적을 성토했다.

이정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라크 파병 때문에 테러대상국이 되고 있다며 "진정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다면 자이툰 부대를 지금 당장 철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북 인권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파월에게 "최근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북한인권법이 오히려 반인권적"이라며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혜선 부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의 6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파병 부대의 철군'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결의대회 후 평통사는 파월의 숙소인 신라호텔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으며, 국민행동은 26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동에 맞춰 청와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골든벨' 울렸다

"청소년 세대에는 국보법 굴레 벗어나길"

24일 한성대 강당은 '국가보안법이 낡느냐, 내가 낡느냐' 도전 골든벨에 참가하기 위한 청소년들과 이들을 응원하러 온 방청객들로 열기가 가득했다.

이번 퀴즈대회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오마이뉴스, 한성대학교 주최로 열렸으며,

10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퀴즈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조항과 역사,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은 사례들 등이 문제로 출제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퀴즈대회에 참가해 보지 않겠냐는 아버지의 권유에 처음에는 법이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꺼려졌다는 중학교 1학년인 박진호 씨는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북한 첩자라고 생각했었다"며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공부할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 법 때문에 통일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에서 참가한 박애자(고 3) 씨는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유린해 온 법"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로 오히려 독재에 악용되어 오기만 했다"고 밝혔다.

퀴즈대회 중간에는 참가한 청소년들이 '국,보,법'으로 삼행시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을, '보'호하는 어른들, '법'같지 않은 것 어서 폐지하세요"라는 삼행시를 지은 오혜운(고 2) 씨는 "한나라당에서 안보보다 뭐다 하면서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이들 3명을 데리고 방청을 하러 온 김미영 씨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골든벨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오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으려면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퀴즈대회에는 장기수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참여했다. 장기수 안희숙 씨는 "청소년들 세대에서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골레 속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이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며 "청소년들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함께 나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퀴즈대회에는 20문제가 넘게 출제됐고, 참가자 이해정(18세) 씨와 신정보람(고 3) 씨가 '골든벨 수상자'가 됐다. 신정보람 씨는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퀴즈대회의 추진위원장을 맡은 홍세화 씨는 "청소년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기회를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 모인 청소년들이 일부에 지나지 않아 아쉽다"며 "국가보안법은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의식, 가치관을 제약하는 법으로 이에 대해 청소년들 스스로가 물음표를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사 처음으로>

<편지>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이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소년이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편지

저는 입시의 최전선에 있는 평범한 고3입니다. 하지만 입시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저는 퀴즈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적이 아닌 동지이고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 배워 온 저에게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일부를 보완한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가 아니라 인권 침해와 권력남용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다시 추가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해 온 독재정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로 한 걸음 전진하는 데 국가안보가 아닌 정치안보로 악용되어 많은 인권 피해자를 만들어 온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형태의 억압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제가 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학교에도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형태로 학생들을 억압하는 학칙이 존재합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학칙에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학생들이 보면서 시민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판적 시민의식'과 '사회적 공공성'을 키워주지 못하는 교육 현실이 매우 부조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민주사회와 통일 시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인권을 억압하는 크고 작은 악습들이 더불어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이루어내어 저희들이 밝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골든벨 수상자인 신정보람 씨가 쓴 편지를 일부 실었습니다.)

<기사 처음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휴대폰 가입자 정보 대량 유출", "개인정보 침해, 매년 급증!", "스팸메일 이유 있었다 개인정보 인터넷 매매", "637만 개인정보 팔려나갔다" 최근 신문지상을 가득 채웠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사고'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자동차 수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로 인한 각종 공해와 사고의 위험에도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별도의 규제나 세금은 부여되지 않는다. 관련 법규들은 경제 발전과 교통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운전자들의 편의와 자동차 산업의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법률적인 보호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의 통행을 제어하거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 또는 경찰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행자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의 주의력과 신랄한 말을 믿고 있다. 만약 사태가 이러하다면 보행자가 자동차에 치어 다치고 죽는 것을 단지 '사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하지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스팸 공해는 이미 도를 지나쳤다. 또한 부유층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범죄에 활용된 사례들은 심각한 사고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해와 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정보주체들은 여기저기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받고 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저 정보수집자의 양심과 국가와 기업의 신뢰성에 기댈 뿐이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정보의 가장 기본인 주민등록제도부터 정보인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주요 소스가 된 지 오래다. 보안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어떤 첨단 시스템이든지 결국은 사람의 판단이 개입된다. 교통사고가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무관하듯이 정보인권침해와 보안기술은 별개의 문제이다.

정보통신부가 사적영역의 개인정보보호를 맡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통부는 그동안 정보통신기업들의 편의와 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해 오지 않았던가.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맡겠다고 한다. 그러나 행자부는 스스로가 하나의 공공기관이 아니었던가. 고작 이미 터져버린 사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고장'을 날리는 정도의 허약한 기관, 소수의 인력만으로 정보인권이 수호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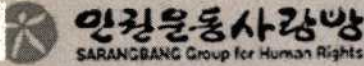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구조에 내재한 '위험'이며 고의로 방치되고 조장되고 있는 '범죄'다. 몇 가지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규제만으로는 해결될 만한 것이 아니다.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절실하다.

◎ 지음님은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27일 (수)
제 268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장애인 정책 제대로 해라
2. 차별은 계속되는가
3. 이주노동자 지원이 '반한'?
4. 평화를 노래해요

장애인 정책 제대로 해라

장애인단체, '구걸' 아닌 '권리' 위한 단식 농성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와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5일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 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25일은 17대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법안 및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농성과 함께 장애인이동권연대·장애인교육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또다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박 대표는 2002년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에 대한 서울시 공개사과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주장하며 39일 동안 단식을 벌였다. 그는 "2년 전 단식의 경험은 두려운 기억이고, 피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면서도 "권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단식에 돌입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대위와 장애인교육권연대로 구성된 농성단의 주요 요구사항은 △저상버스 도입의 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 △'장애인교육지원법(가칭)' 제정 등이다.

지난 9월부터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마련한 '이동편의 증진법안'(아래 증진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증진법안에는 저상버스 도입을 '권장사항'으로서만 규정하고 실질적 제재수단이 빠져 있을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는 2014년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전체 시내버스의 10%만을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교육권연대 김형수 사무국장은 "이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시내버스의 90%가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새로 마련되는 모든 버스차량에 대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등 8개 사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지만, 국회와 각 교육청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올해 초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장애 학생의 무상교육확대를 위한 예산과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 예산, 특수교육기관 유치부 중일반 운영 예산은 교육부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영희 최고위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이고 교육에 대한 요구 역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인데, 이를 위해 단식 농성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사 처음으로>

차별은 계속되는가

비정규직 불사른 고 이용석 씨 1주기 추모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으로 인해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이 초읽기에 들었던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조의 광주전남 지부장이었던 고 이용석 씨의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26일 유가족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04 아름다운 청년 이용석노동자 정신계승사업 공동준비위원회'는 '이용석 노동열사 정신계승 공동 실천주간 선포식'을 열어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비판하고 총파업의 결의를 다졌다. 고 이용석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종로공원에서 열린 비정규 노동자 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분신해 닦새 뒤에 숨졌다.

민주노총의 이혜선 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열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을 만든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총파업 투쟁을 통해 차별 없는 세상의 깃발을 꽂자"고 말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11월로 예정된 총파업을 준비하며 각 사업장을 조직하는 중에 있다.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이주노동자 농성단도 선포식에 함께 참석했다. 농성단 대표인 아누와르 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도 똑같은 탄압, 똑같은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자본과 국가가 노동자들을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는 하나다"라며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이루어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암으로 투병중인 재능교육노조 전 위원장 정종태 씨는 "투병중이라 힘든 상황이지만, 이용석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집회에 나왔다"며 "어서 회복되어 동지들과 함께 서고 싶다"고 말해 참가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선포식에 이어 종로에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까지 자전거 대행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원 밖으로 나가려는 노동자들을 경찰이 막아 잠시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평화로운 자전거 행진까지 이렇게 통제하는 이 정부에 과연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공동실천주간은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30일에는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1주기 추모제가, 31일에는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제1회 아름다운청년 이용석노동자상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이주노동자 지원이 '반한'?

안산의노 박천웅 목사 5일째 규탄 단식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한활동 규정에 이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국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반한활동을 했다"는 발언이 갈수록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정원이 지난 4월 반한단체 '다와를 이슬람코리아'를 적발하고 핵심조직원 3명을 강제추방 했다"고 정부자료를 공개, 이주노동자들의 '테러지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4일 또 다시 "이 단체가 반미성향의 자마이트 이슬람당 한국지부로 불법체류자들을 조직화했다"고 밝혔다. 언론은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테러지원에 대한 공포를 연일 보도하며 장단을 맞춰 주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시한 법무부 자료에는 지난 4월 작성된 '불법 체류자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과 '반한활동 관련자 단속실적표'가 전부이다. 이 두 자료에는 다와를 이슬람코리아라는 이름은 물론이고 지난 4월 3명의 방글라데시인이 검거돼 추방됐다는 사실조차 언급돼 있지 않다. 국정원 관계자조차 "반한 활동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그렇게 결론내리지도 않았으며 보고서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들의 테러 지원 위협을 지적했고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조차 이른바 '반한 인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항의하며 지난 22일부터 단식에 들어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웅 목사는 "국감에서 나를 반한 활동가로 지목했지만 어떻게 반한을 했는지 그게 왜 반한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반한 활동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인권적 탄압을 정당화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도 함께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철승 공동대표는 박천웅 목사의 반한 용의에 대해 "심야에 집까지 들이타쳐 잠자는 이주노동자를 폭행하여 끌고 가는 야만적인 인권유린에 반대하는 것이 과연 반한 활동인가"라며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불법체류자들을 돕는 것이 반한이라면 반한 아닌 것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이금연 소장은 "설사 본국으로의 송금이나 정당 활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마치 외국인 노동자는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감의 '반한 파문'과 관련하여 "김재경 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했지만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발표했을 뿐이라며 어떤 사과나 유감의 표현도 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이런 경솔한 행위가 전체 이주노동자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알고는 있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기사 처음으로>

평화를 노래해요

"애들이 힘내! 머지않아 너희들에게도 평화가 올거야", "애들이 꿈을 버리지 마" 하얀 천 위에는 격려의 말부터 약, 빵, 과일, 전기, 학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타까지 이라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

봉천동에 있는 두리하나 공부방에서는 25일 '박기범이라크통신' 별음자리표 씨, '평화바다' 셸림 씨, 평화인권연대 아침 씨가 아이들과 함께 평화수업을 진행했다.

별음자리표 씨는 "주먹으로, 총으로 친구가 될 수 없어요"라며 '앗살람 알라이쿰'에 이어 '총을 내려라'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노래가 길어요", "아저씨 골롬 님 왔어요"라며 탄성을 피우더니 이내 장단에 맞춰 함께 흥얼거린다. 평화를 노래해 온 별음자리표 씨는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라며 "권력자나 가진 자들을 향한 싸움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통해 소통하면서 평화를 준비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3년에 이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평화활동을 하고 돌아온 셸림 씨는 이라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셸림 씨는 "커서 되고 싶은 것이 '살아남는 것'이라는 이라크 아이들의 말에 이라크로 갈 결심을 하게 됐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희들이랑 똑같은 친구들이 이라크에 살고 있어.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도 집 근처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폭탄이 터져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집밖으로 내보내질 못해. 발전소가 폭격돼서 전기도 만나절박에 쓸 수가 없어.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하러 가야 하는 아이들도 많아.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겹이나 석유 등을 파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셸림 씨는 한국군 파병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한국에서도 이라크를 도와준다고 군인들을 보냈지만 이라크 사람들은 군대를 원하지 않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죽이니까 점점 더 화가 나서 나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라크 아이들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분노가 느껴졌을까. 아이들은 "이라크도 '우리' 친구잖아요. 제발 이라크를 괴롭히지 말아요", "부시 나빠요. 석유 훔쳐가려고 전쟁 일으켰잖아요", "노무현 아저씨 이라크로 군인 보내지 말아 주세요"라며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자 이제 평화놀이 해볼까?" 아침 씨는 아이들에게 역할이 적힌 쪽지 하나씩을 나눠주고 빨간 털실을 던져 관계의 끈을 만들게 했다. "바그다드에 미사일이 떨어져 담 옆에 서 놓고 있던 8살의 파데한이 그 밑에 깔려 목숨을 잃었어요" 아침 씨의 이야기가 끝나면 파데한의 역할을 한 아이는 끈을 놓는다. 아침 씨는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자연, 그리고 시설 등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다"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한국군이 하루라도 빨리 철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28일 (목)
제 268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2.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3. 들을 수 없었던 폭력의 고통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공안문제연구소 피해자들, 폐지 촉구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대상이 된 표현물의 저자들이 모여 "공안의 먹이사슬'에 충실한 사냥개인 '공안문제연구소'를 국가보안법과 함께 지금 당장 폐지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서울대 김세균 교수 등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문제연구소가 빚어낸 문제점들을 밝혀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용공'으로 감정한 정태춘의 '아, 대한민국'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공안문제연구소가 1983년부터 2004년 8월 말까지 책, 영화, 노래 등 총 8만여 권에 달하는 우리 사회 전분야의 표현물을 무작위로 '감정'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96년 발표한 자신의 글을 감정목록에서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강실 씨는 "지역여성회지에 실렸던 글조차 사상검증한 정부는 국민의 생활 깊숙한 곳까지 사찰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감정목록에는 '2000년 독립영화제작지원서', '간디학교 교사연수 자료집' 등 '사상'과 아무 관련 없는 문건도 보였다.

공개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사찰도 그 규모가 놀랍다. 공안문제연구소는 민주노동당을 창당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찰해 280여 개의 회의 및 홍보자료 등에 '좌익'과 '용공'의 딱지를 붙여왔다. "정치탄압"이라고 분노하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국회 업무감사 자리에서 공안문제연구소 소장파 연구원 등은 폐지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안보의 수호자'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자본주의의 미래> 등 수 편의 논문을 '좌익'으로 감정 당한 김세균 교수는 감정인 등 공안문제연구소 종사자들을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활동하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이름 붙였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어둠의 자식들'에 의해 유지·통제되는 국가에서 사회 발전은 질식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이들의 정체를 즉각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저작 <친일파에 관한 명상>을 '좌익·용공'이라고 감정 당한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표현물의 성향을 무엇으로 감정하는지 기준을 모르겠다"며 '끼워맞추기식' 감정을 문제삼았다. 특히 그는 "학생 조직 사건과 같은 경우 소지한 책을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좌경', '용공'으로 감정해 국가보안법 혐의자로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언론 역시 '감정대상'에 빠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정일용 기자는 "조선중앙통신사와 협약을 맺어 보도했던 '사실보도'조차 감정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언론 검열과 마찬가지로 불쾌해 했다.

한편 같은 날 전국 대학교수 1천 명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 일천인 선언'을 통해 "대체, 보완 없는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93년 영변핵발전소 문제'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을 당시, <역사비평>을 통해 '전쟁 위험'을 알리려 했던 자신의 경험을 발표했다. 그는 당시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도 '이적시비'에 휘말릴까봐 글에 무려 1백 개의 각주를 달아 '학술 논문'처럼 보이게 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면서 국가보안법을 의식한 자기 검열의 심각성을 실증해 보였다.

같은 날 873명의 7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사 처음으로>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참으로 맑은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로운 모습, 그의 맑은 눈은 그것을 말해주었습니다...인간의 생명이 존귀하고 저마다 천부적인 생명을 지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젊은 사형수의 죽음을 통해 새삼 깨달았습니다"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영우 신부는 한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지켜본 사람의 말을 전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사형폐지입법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용 변호사는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사회방위를 위해 인간을 일방적인 수단으로 희생시키는 제도"라며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형수들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형수 가운데 약 70퍼센트가 빈민 계층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사형수의 약 70퍼센트가 흑인이고 백인을 죽인 살인범은 흑인을 죽인 경우보다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3.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인권위는 "범죄와 판결은 다분히 사회적인 것"이라며 "응보로서의 형벌보다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성찰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NCC인권위원회 황필규 목사는 사형제도가 △형벌의 본질인 교육관에 배치되고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사형제도에 반대했다. 현대사회에서 형벌상의 '형벌'은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형제도는 오히려 '응보'의 의미를 더 강하게 갖고 있다. 하지만 '범죄'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에 의한 구조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이는 사회 공동의 책임이지 '응보로서의 개인적 형벌'은 적합하지 않다. 또 김도행 씨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판의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경우 1973년부터 2004년까지 사형수였다가 무죄가 입증돼 감옥에서 풀려난 경우는 114건에 달한다.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이나 억제 효과가 있다는 사형찬성론자들의 주장도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와 없는 주의 살인범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살인범죄율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적으로도 사형제도는 폐지되는 추세에 있다. 1977년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을 때,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0여 개국에 이른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2의정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고 1997년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사형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서를 해마다 통과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155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됐을 뿐 국회에서 논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회기가 만료돼 자동폐기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형제도 폐지에 따른 종신형제 도입이 별다른 토론 없이 합의됐다. 하지만 종신형제가 사형제도에서 '국가에 의한 살인' 문제만을 회피한 또다른 '사회적 살인'임을 고려할 때, 종신형제 도입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피해갈 수 없다.

<기사 처음으로>

들출 수 없었던 폭력의 고통

장애 여성들에게 가정은 어떤 것일까. 가정은, 집안에서 간혀 지내기 쉬운 장애 여성들의 일상 구성구석을 지배하면서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지만 정작 그녀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가정 내에서 묻히고, 사회적으로도 장애 여성들의 경험에 입각한 목소리는 도드라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날 짐스러워한다", "모든 가족 행사에 번번이 소외되어 자존감을 느낄 수 없다", "시설에 들어가길 은근히 강요한다" 서울여성장애여성폭력상담소 강명숙 소장은 장애 여성들이 생각하는 현실 속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다.

장애 여성의 67.8%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졌다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 '2002년도 장애인 실태조사'가 시사하는 것처럼, 그녀들은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 여성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에 대해서 함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시각장애여성회에서는 "가족의 철저한 무시와 차별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독에서 지내며 그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던 여성시각장애인도 있다"며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의 배복주 소장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가정뿐만 아니라, 후견인과의 동거 등으로 이루어진 비혈연, 비혼인 가정에서도 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배 소장은 "장애 여성들을 위한 구조적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소수 존재하는 후견인 층은 소중한 것이지만 일부 후견인들이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증증 혹은 정신지체 장애 여성들의 건강, 결혼, 경제적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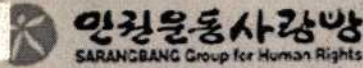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 매뉴얼'을 제작 중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27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예방 매뉴얼 제작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이와 같이 장애 여성과 가정폭력의 감춰진 고리를 공개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장애 여성을 위한 전문 가정폭력 상담소는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내의 가정폭력 상담소 단 한 군데 뿐이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장애 여성 가정폭력 상담소와 쉼터의 전국적 확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29일 (금)
제 268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해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2. 노동자의 꿈은 죽음을 넘는다
3.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4.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외 2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02년도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한 달에 78만7천여 원이고)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69만2천여 원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박 씨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고 딸 이승연 씨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서 이들 가족에게 한 달 생활비로 69만2천여 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한 달 평균 15만8천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장애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외에 1급 중증장애인에게 부가급여로서 3개월에 24만 원을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실제 생활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에 박 씨 외 2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및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결정 내용은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농촌 중소도시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다수 대도시 장애인 가구가 최저생계비를 통해 최저생계를 보장받는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도 모르는지 헌재는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간다운 생활'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가 '객관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국가가 '객관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최저생계비가 타 법률에 의한 지원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제시한 '타 법률에 의한 지원'에는 심지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도 포함되어 있다.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헌재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정부안보다 오히려 퇴행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최저생계비가 새롭게 계속되는 해이고 정부는 이미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을 약속했다.

유 사무국장은 "헌재가 각하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황당해하며 "헌재가 정부 계획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혹은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을 부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재는 과연 최저생계비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유 사무국장은 "29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노동자의 꿈은 죽음을 넘는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85호 크레인 - 김주익·곽재규 열사 추모 자료집]

김주익·곽재규 열사 추모 1주기사업 추진위원회/ 617쪽/ 2004년 10월

'노예가 품었던 인간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노예의 사슬을 끊어낸 노동자의 꿈과 삶이 한 권의 자료집으로 발간됐다.

자료집에는 '열심히 일만 해온 노동자를 나이가 많다고 쫓아낼 공리만 하는 회사, 수억의 흑자가 나도 단 한푼의 임금도 올려줄 수 없다는 회사,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며 월급까지 가압류하는 회사'에 맞서 35미터 크레인에 올라가 129일 동안 외롭게 싸웠던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이 있다. 또한 그를 통해 노동자로서 눈뜨고 싸움을 함께 이겨낸 노동자들의 뜨거운 연대가 녹아 있다.

2003년 10월 17일 아침 8시 김주익 씨가 주검으로 발견된 시점을 시작으로 한진중공업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기까지의 전 과정과 김주익·곽재규 열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노동자의 들불 같은 저항의 몸짓은 이 자료집을 통해 되살아난다. '현장의 힘' '가속대폭위신문' '85호 크레인' 등 소식지, 각종 선전문, 추모사, 보도자료 등에서는 당시 싸움의 생생함이 전해오고, 민주노동당 인권위의 사건보고서 및 신문자료 등에서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고발하려했던 부당노동행위,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민주노동당 인권위는 김주익 씨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가압류와 손배소송,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자를 과도하게 착취하는 한진중공업의 경영방식 △가압류와 손배를 제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직무유기 △무책임한 대통령과 언론의 '노동귀족론' 등을 들고 있다. 결국 이 싸움은 7차 교섭까지 가서야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 노사간 임금인상, 회사의 공개사과, 해고자 복직, 민·형사상 책임 불문 등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일단락 된다.

김주익 곽재규 씨는 죽었으나 마치 산 자처럼 남겨진 자에게 투쟁을 계속하고 독려한다. 노예의 사슬밖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노동자에게 싸움만이 '희망'임을 호소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 심판에 나섰다. 28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헌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최근 잇단 헌재의 정치적 판결이 권력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헌재를 묶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특별법(아래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려 난이 되고 있는 헌재는 역설적이게도 87년 대통령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일어난 6·10 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탄생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미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며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내린 국가보안법조차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재가 이를 외면하는 결정을 수 차례 해 왔다.

이에 건대 임지봉 헌법학 교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헌재가 정치화되고 있다"고 질타하고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파간의 정치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각 세력들이 정치권 내에서 스스로 정치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예 시작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헌재로 달려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받는지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과거정산 관련 법 등 4대 개혁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엽보를 놓고 있어 이와 같은 지적이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토론회자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가 사실상 '헌법개정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국회 뿐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이경주 헌법학 교수는 헌재가 지금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헌재에 대한 국민심사제 및 소환제 도입 등의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와 국회에 의한 헌법재판관의 선출 또는 국회추천 몫의 대대적 확대, 국회청문절차의 강화 등을 통한 간접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구성도 "법관 중심에서 헌법학교수나 여성 등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민변 김진욱 변호사는 "헌재 소장이 누구인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현재는 폐쇄적인 공간이었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현재를 종속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기사 처음으로>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여성의전화 정춘숙 부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그저 있을 수 있는 문제'였던 가정폭력이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인권침해로 인식되면서 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하고 "하지만 현재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입법취지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가꾸며'라는 문구를 '목적'에서 삭제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는 매우 추상적인 법 정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범임에도 불구하고 비(非)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가정 폭력의 정의에 '성적' 문구를 추가하여 아내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정의를 '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서 '...피해를 입은 자와 법률상·사실상 부양 받는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가해자, 현행법으로 체포 가능 △ 각 처분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보호처분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명문화 등도 개정 내용에 포함된다.

한국의대 이호중 법대 교수는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보호'라는 입법취지에 치중한 나머지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에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보호처분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가정폭력범죄가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제도를 두어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적극적인 형사처벌 위주의 개입정책이 가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역으로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국가 개입을 주저하게 만들어 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인권 및 안전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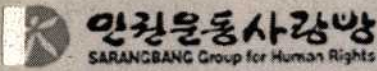
이찬진 변호사는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은 여성계의 문제의식 뿐 아니라 노인학대, 아동학대와 같이 폭증하는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내용이 대폭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는 여성부,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개정안의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각 기관이 책임지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0월 30일 (토)
제 268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2.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3.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4.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5. <알림> 10월 반딧불 -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고 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쏟아지고 있는 헌재에 대한 비판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재와 같은 위헌입법심사기관들은 애초부터 양면성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가 가능한 때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현대에 와서 헌재와 같은 기구가 많은 나라에 일반화된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건 민중들의 통제가 느슨해지면 헌재와 같은 기구들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가진 자들의 특권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만다. 결국 헌재도 지배세력과 민중세력 간의 힘의 균형에 따라 그 위치와 성격이 규정되는 권력기관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최근 헌재의 충격적인 결정들로 인해 헌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지만, 헌재의 반인권적이며 가진 자들에 편향된 결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토지공개념 도입 위헌 결정,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28일, 헌재는 장애인 가족이 제기한 최저생계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배반했다. 이처럼 헌재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이나 사회권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축소 해석해 왔다. 반면 사유재산권이나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원리는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만이 헌재를 '헌법 정신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본연의 임무에 묶어둘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검증한다는 발상은 안이하다.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 대법관들도 직접 선출·소환하는 일, 즉 '민중'을 주인으로 삼아야 할 헌재가 '민중'을 물어뜯는 늑대로 돌변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민중적 통제뿐이다. 민주국가의 주인이 되는 길은 국가권력을 민중의 통제하에 두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 언론개혁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제·개정을 위해 인권·시민단체들이 거국적으로 뭉쳤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거나 제·개정되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법안들을 저지시키기 위해 '좌파사비'와 '위헌론'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선동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와 '언론개혁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아래 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원회)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29일 '4대 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당리당략을 건어치우고 개혁입법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행동의 김영호 상임대표는 "지난 9월 21일 입법 발의한 언론개혁법은 편집권의 독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자본의 소유지분 제한이 핵심인데 열린우리당의 입법안엔 그것이 실종되었다"고 현행 입법안을 비판했다. 또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 헌법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좌파적'이라고 색깔론을 펴는 한나라당과 족벌언론에 무릎 꿇어 언론개혁법의 핵심을 누락시킨 열린우리당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국민운동본부의 박경양 상임대표는 "사학의 부정과 비리는 학습권 침해로 드러나며, 특히 사학의 비율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이는 국민의 교육권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사립학교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크게 후퇴시켰고 한나라당은 이것조차 "사학 건학 이념에 위배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박 대표는 "비리와 부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여야를 힐난했다.

그동안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정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선별적으로 처리되어 왔다고 주장하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회의진 공동대표는 "군의문사를 포함, 국가에 의한 모든 학살 문제가 차별 없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피맺힌 절규를 토해내기도 했다.

연석회의는 11월 중순까지 반드시 개혁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먼저 11월 2일 국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보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농성을 시작하며 같은 날 범국민위원회도 농성에 돌입한다. 11월 6일 '4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12일에는 국회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어 국회를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은 28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또한 허구적인 안보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변과 민주법연은 "단순히 법 폐지만으로 국가보안법의 해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폐지가 그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열린우리당의 형법개정안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본래 목적과 배치된다"며 "국보법에 의해 처벌되던 모든 행위를 형법 개정 등을 통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의 형법개정안에 포함된 '내란목적단체'에 관한 조항(안 제87조의 2)은 현행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제2조)과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민변과 민주법연은 "실제로 지금까지 공안과 범인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규정' 등을 냉전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적용하며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것에 비추어볼 때, '폭동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악용해 미약하고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쉽게 유죄를 인정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뿐 아니라 두 단체는 '처벌공백론'을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과 이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부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을 내자 기다렸다는 듯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처벌공백론'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상 내란죄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심지어 국가보안법처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민변과 민주법연은 "처벌공백을 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이나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열린우리당의 대응은 처벌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범위를 좁히려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근본 취지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것은 "처벌하면 안되는 행위임에도 처벌해온 행위들은 '처벌공백'이 아니라 '처벌불가'의 영역에 놓아야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여러 가정적 사례들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비현실적인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남한 주민이 북한에 가서 노동당 행사에 참가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남북 교류절차에 관한 교류협력법 제9조, 제27조를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폭동을 조직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내란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집회에서 인공기를 흔들었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서 그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좋고 싫음을 떠나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두 단체의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체제라면 당연히 사상·이념·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분단 상황이 이러한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구시대적 냉전체제인 '국가보안법 체제'를 완전히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현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가진 자들의 자가용 유지비도 안 될 36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빈곤한 자들의 삶을 상상이나 해봤는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망각한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의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기각 결정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드높다. <하루소식 2004년 10월 29일자 참조>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장애인 이동권 연대 등은 29일 헌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판결은 하루에 3명이 생계를 비판해 자살하고, 600만 빈곤층과 100만의 빈곤 아동들이 존재하는 현실에 등을 돌린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경순 소장은 "최옥란 열사의 죽음이 준 메시지를 떠올리라"며 "장애인들의 최저생계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라"고 성토했다. 지난 2001년 겨울,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다 이듬해에 숨을 거둔 최옥란 열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최옥란 열사에 이어 위헌 소송을 냈던 이승연 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2년 반 동안 기다려 왔는데,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리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양영희 소장은 헌재가 장애인에 대한 타 법률의 지원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두고,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률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할인과 감면 혜택 일색"이라고 꼬집었다. 양 소장은 자동차 감면 혜택의 예를 들며 "가난한 장애인들이 얼마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겠느냐"며 '무늬만 요란한' 타 법률을 근거 삼아 내린 기각 결정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허혜영 상임활동가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답게 살 권리'는 전쟁이나 경제위기 등 어느 순간에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일깨웠다. 이어 "빈민의 목소리에 근거해 최저생계비 등을 정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이번 결정은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을 저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새롭게 제정된 최저생계비를 12월 1일 공표하고, 내년 3월에는 2006년부터 도입될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10월 반딧불 -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 상영작: <나와 부영이>
- 부대행사: 성매매 피해 여성 인권단체 활동가가 들려주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삶
- 일시: 10월 30일 늦은 6시
- 장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 대강의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